



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안 논의와 시사점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미 연준(Fed)의 3차 양적완화(QE3) 시행 이후 정책 종료 시점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음.

- 현재 미 연준은 매달 국채 450억 달러와 모기지담보증권(MBS) 400억 달러, 총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, 정책시행 시 종료 기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종료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
- 2013년 5월 버냉키 연준 의장이 고용시장과 경기회복세를 고려하여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시사함에 따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음.
- 지난 8월에는 미국의 7월 실업률 하락, 하반기 미국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 등을 근거로 9월부터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현실화되지 않았고, 양적완화 축소 시점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.
- 10월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는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중단 사태와 주택시장 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, 발표에 앞서 양적완화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음.

■ 최근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 시기 논란과 더불어 총 850억 달러의 채권 매입규모를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.

- 양적완화 축소 규모의 경우 축소 시작 시점에는 약 100억~15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양적완화 축소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.
- 양적완화 축소 방식으로는 첫째, 국채와 모기지담보증권 매입규모를 각각 50% 비율로 축소 후,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모기지담보증권의 축소 비중을 점차 줄이고 국채의 축소

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.

- 둘째, 국채 매입규모를 우선적으로 축소하고, 이후에 모기지담보증권 매입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.

■ 미 연준의 일부 의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양적완화 축소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, 규정에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음.

- 미 연준의 일부 의원들은 미 연준의 정책에 따른 시장의 과잉반응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
- 따라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양적완화 축소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때의 반응은 안정적인 것이며 인플레이션 통제도 가능하다고 말함.
-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양적완화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들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정책 선택의 제한과 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함.

■ 양적완화 축소 시기와 방법과 관련한 논란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현실화되고 금리 수준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들에게 있어서 우호적인 자산운용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음.

-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경우,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금리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임.
- 특히, 최근 반복된 양적완화 종료와 관련한 논란으로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, 향후 점진적인 양적완화 종료로 안정적인 경제 회복세가 유지되고 금리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음.
- 저금리 지속으로 자산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장기적인 금리 정상화로 인하여 운용자산 수익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.

(WSJ, 파이낸셜뉴스 등)